



2020년 12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3.(수) 13시 15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2. 22.(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
담당과장	이상준 과장(044-203-4330) 최종욱 과장(044-200-5839)	담당자	김성철 사무관(044-203-4334) 서지만 사무관(044-200-5839)

그린뉴딜,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

- 산업부·해수부「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·보급 기본계획(21-30)」 발표-

① 저탄소·무탄소 등 선박배출 온실가스 70%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 기술개발 지원 및 친환경 선박 실증 프로젝트(그린쉽-K) 추진

* 10척 이상의 친환경 실증 프로젝트 및 4척 이상의 테스트베드선박 구축

②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 528척 전환(전환율 15%)을 통해 온실가스 40만 톤 감축, 11조원 생산 유발, 4만명 직·간접 고용창출 기대

□ 정부는 23일(수)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'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' 및 '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'를 개최하고,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「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」을 확정하였다.

□ 국제해사기구(IMO)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EU의 배출권거래제(EU-ETS) 시행(예정)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조선·해운시장이 기존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,

○ 우리정부도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시행('20.1.)한 데 이어, 금번 친환경선박 기본계획*을 마련하였다.

*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,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, 5년 경과 시 평가·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·보완

○ 또한, 그린뉴딜·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 및 한국형 친환경선박 이미지 창출을 위해 '2030 그린쉽-K 추진전략'이라고 명명하였다.

□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→ 온실가스 70% 감축기술 개발

□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△LNG·전기·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·고도화→△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→△수소·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지원한다.

* 선박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(25년 40%→ 30년 70%)

-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, 전기,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·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.
-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을 위한 브릿지(Bridge)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과, 마찰 저항 저감,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한다.
- 아울러, 초기단계인 무탄소선박의 경우, 수소·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저장탱크 및 연료공급·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탄소 선박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.
- 이를 통해, '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*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%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

- 정부는 이를 위해 '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'(22-31년, 약 9,500억원 규모)을 추진(4분기 예비타당성 검토 진행중)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②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, 그린쉽-K 추진

□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, 기술성·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육·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.

- LNG 벙커링 전용선(~'22), LNG-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(~'25)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.

* LNG 벙커링선(연료공급선) 1척, 전기추진선 2척, 하이브리드 선박 3척, 혼합연료 선박 2척, 수소선박 3척 등

○ 아울러,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(~'23),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('22~)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.

<그린쉽-K 실선건조 프로젝트 예시>	<해상실증 테스트베드>
<p>① LNG 벙커링 선박 프로젝트 ▶ 한국형 LNG 화물창 등 실증('20~'22)</p> 	<p>①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개발 ▶ 친환경선박·기자재 실증선박 건조('20~'23)</p> 
<p>혼합연료·하이브리드 추진 선박 프로젝트 ▶ LNG-암모니아 혼합연료추진 선박('21~'25)</p>  	<p>② 퇴역예정인 노후관공선 활용 ▶ 신기술 해상실증 선박으로 개조('22~)</p>  

○ 또한,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·안전기준을 신속히* 마련하고, 암모니아·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·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.

* 「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」 제정('20.7)

** 개발된 新기술이 선박적용 및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잠정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, 신속하게 선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후 적용된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이를 공식기준(법령)으로 마련

③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→ 528척 친환경선 전환, 전환율 15% 달성

□ LNG·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.

○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,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(DPF)를 설치하여 개조하는 등 '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.

- 이 과정에서 표준설계 및 통합발주를 활용하여 건조비 절감*이 가능해짐으로써, 비용 상승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* 설계비, 장비 구매비, 건조비를 포함하여 최대 20%까지 절감

○ 민간선박의 경우, 유·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,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<공공부문 388척 전환>



<민간부문 140척 전환>



○ 전체 대상선박 3,542척의 15%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, '30년까지 4.9조 원의 매출, 11조 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- 아울러, 조선·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(1.5조 원), 전남(1.2조 원), 울산(1조 원), 경남(0.4조 원)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④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제 구축

□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, 전기 등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.

○ LNG병커링 선박 운영,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 공급 수단을 다변화하고,

* LNG 병커링 인프라(25년 70만톤→30년140만톤)

- (단기) LNG 운반·병커링 겸용선 1척 운영('20.12월), 병커링 전용선 2척 추가투입('22년말)
(중장기) LNG 병커링 전용선 2척 추가 건조·운영, 부산·울산 등 주요항만에 육상터미널 구축

○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·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.

* 전기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(AMP 25년 174개소→30년 248개소)



□ 또한,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,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여,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,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·검증,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‘30년까지 1.3조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 톤(‘17년 1,181만 톤 대비 3% 수준)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(PM₁₀) 저감 대책(‘25년 감축목표 약 7,500톤)에 추가하여 약 3천 톤(‘17년 18,936톤 대비 18% 수준)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
- 정부관계자는 “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규범상 의무이며 해운·조선분야의 새로운 도전과제로, 산업생태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.”라고 강조하고,
- “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운·조선·기자재 산업분야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, 새 시대를 선도하는 新성장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과 이상준 과장(☎ 044-203-4330), 김성철 사무관(☎ 044-203-4334),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최종욱 과장(☎ 044-200-5839), 서지만 사무관(☎ 044-200-58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추진배경 및 개요

- (법적근거/수립주체) 법 제3조제1항 / 산업부·해수부 장관
 - * 계획기간은 10년으로 정하되, 5년 경과 시 평가·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·보완
- (배경) 국제해사기구(IMO)의 대기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국가차원의 적극 대응을 위해 친환경선박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제시 필요
- (의의) 제1차 기본계획은 그린뉴딜과 연계를 통한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「2030 그린쉽-K 추진 전략」으로 명명
 - * (그린쉽)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,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'친환경선박' 개념

2. 국제 환경규제 및 시장전망

- (규제) 국제해사기구(IMO)는 해양환경 규제를 지속 강화 중이며, 특히 온실가스(CO₂) 규제로 해운·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 불가피
- (시장전망) 온실가스 규제강화로 '35년까지 기존연료 선박의 LNG 추진선박으로 전환 가속화, '30년 이후 무탄소선박 출현·확산 전망
 - * 현재 전 세계 선박 102,960척 중 5,753척(약 5.6%)만이 친환경기술 적용 중

3. 국내외 현황 및 정책방향

- (주요국 현황) 규제대응 및 시장선점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계획 수립 중이며, 기술개발과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
- (국내 현황) 체계적·중장기적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이 부족하고, 민간에서는 건조비 부담 등의 이유로 친환경 전환에 소극적
- (추진 방향) 국가 차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, 시장전망에 따른 체계적 기술개발 지원 및 수혜자 맞춤형 유인정책 마련
- (로드맵)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해운·조선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'집행계획'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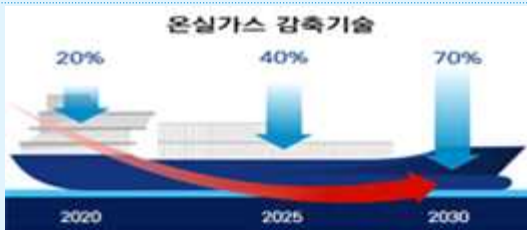
4. 비전 및 추진전략

비전

Greenship-K 기반 구축으로 2050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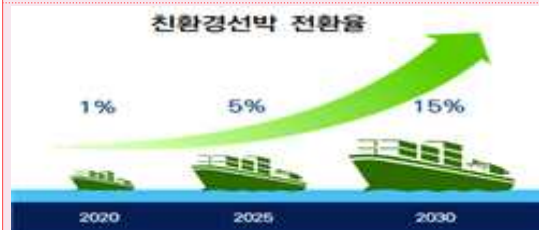
목표 및 추진 전략

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



※온실가스 70% 감축기술 개발
(‘25년: 40%→ ‘30년: 70%)

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新시장 창출



※친환경선박 전환율 15% 달성
(전환대상 3,542척 중 528척 전환)

중점 추진 과제

1.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

- ① 수소·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
- ② 혼합연료 추진 등 저탄소 선박 기술 개발
- ③ LNG·전기·하이브리드 추진기술 고도화

2. 新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

- ① 시험·검사기준 마련
- ② 시험·평가 시설 구축

3.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(그린쉽-K) 추진

- ① 그린쉽 K 시범선박 건조
- ② 해상실증을 통한 기술검증 및 시장진입 지원

4.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

- ① LNG선박 연료공급 확대
- ② 무탄소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

5.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

- ① 공공부문 선제적 전환
- ② 민간부문 전환 확산

6.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

- ① 국내 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
- ② 디지털·통계기반 선박운영 체계 마련

5.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

□ 추진전략 1 :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선도 기술 확보

- (무탄소 기술) 연안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해상실증,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·실증 등 추진
 - *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&D 플랫폼 구축사업('19~'23), 액체수소 저장 및 공급시스템 안전기술 개발('22~'26), 암모니아 내연기관 추진기술 개발 및 평가('23~'26) 등
- (저탄소 기술) 저탄소·무탄소 혼합연료 및 이중연료 엔진개발, 최적선형 및 신소재·경량화 구조 등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개발
 - * 연안용 혼합연료 추진 기술개발 및 실증('21~'24), 혼합연료 스마트 엔진 개발('22~'25), 마찰저항저감 기술('23~'27), 선체 복합 부가물('24~'30), 구조 경량화('22~'26) 등
- (기존 기술) LNG·하이브리드 등의 핵심부품 국산화, 저감효과 높은 LNG 추진엔진 및 대형선박용 하이브리드 기술개발
 - * 한국형 LNG 화물창 등 상용화 기술개발('20~'22), LNG엔진 개발('22~'25), 대용량 선외식 전기추진기 및 대용량 모터 패키지 개발('22~'26), 하이브리드 추진선박 통합모듈 설계('23-28) 등

□ 추진전략 2 : 新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

- (시험·검사기준) 신기술의 성능·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험기준을 마련하고,
 - 개발된 기술의 조속한 선박적용을 위해 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에 적용하고, 안전성 검증 후 공식기준(법령) 마련
 - * 「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」 제정('20.7)
 - (시험·평가설비) 기존 육상설비는 적극 활용하되, 시험·평가 품목의 다변화 및 확대·보완(시험용량 확대 등) 등 고도화 추진하고,
 - * (LNG) 기존 시설은 제품단위에 활용, 연료탱크 등 시험·평가를 위한 설비 추가 구축, (수소) 연료전지 설비 구축 완료 후 연료탱크·공급장치 등에 대한 설비로 확대
- ⇒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, 미래 친환경연료 및 기술에 대한 육상시험설비 신규 구축 추진

□ 추진전략 3 :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(그린쉽-K) 추진

- (시범선박) 연안선박 중심으로 성능평가 실적이 있거나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선박에 적용*하여 실증('21~) 추진

* 기술적합성·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 선정(산업부·해수부 '그린쉽-K 선정위원회' 운영)

- 新기술을 적용한 시범선박 건조·운행을 통해 실적 확보(~'27) 후 국제대형선박으로 확산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(~'30)

- (해상실증) 무탄소 선박 기술(수소, 암모니아 혼합연료 등)의 안전성·신뢰성 검증을 위해 선박적용 테스트베드 구축(~'25)

- 실제 선박탑재 이력(Track Record)을 토대로 기술 고도화, 독자적 기준마련 및 국제 표준화 연계 등 국내기술의 시장진출 지원(~'30)

□ 추진전략 4 :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

- (LNG) 병커링 전용선 및 육상 터미널 등으로 공급수단 다변화 및 공급능력 확충, LNG 추진선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기반 확보

* ('20년) 35만톤 → ('25년) 70만톤 → ('30년) 140만톤

▪ (병커링 선박) 1척(겸용선, 탱크용량 7,500m³, 20년~) → 3척(겸용선 1, 전용선 2(7,500m³, 500 m³), '22년~)

▪ (육상터미널) 울산·부산항 구축 추진('26년~) → 광양·인천·평택·당진항 등 확대

- (무탄소연료) 13개 주요항만에 설치 중인 고압 AMP를 전기·하이브리드 선박용 고속충전설비로 활용하고,

* (AMP, Alternative Maritime Power) 접안 중 선박에 육상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

- 수소·암모니아는 '시험용 연료공급 인프라' 先 구축 후 운영(~'25) 하여 향후 상업용 인프라로 전환

▪ (전기) 부산항('19년 시범사업) → 전국 주요항만(울산·인천 등 13개항)으로 AMP설치 확대

* '30년까지 13개 항만 248개 선석보급 [(20년)21개소 → ('25년)174개소 → ('30년)248개소]

▪ (수소·암모니아) 기술개발 등과 연계하여 R&D 시험용 소량 → 선박 운항용 대량 공급 추진

□ 추진전략 5 :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

- (공공부문) 노후선박(199척)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및 선령 10년 미만(189척) 친환경 개조 등 총 388척 전환(~'30)
 - 노후선박의 상태평가 → 전환계획 수립 → 통합발주 → 건조 관리까지 '전주기 건조업무 지원 일원화'(해수부, '21~)를 통해 건조비 절감
 - * 표준설계통합발주로 총 건조비 15~20% 절감 가능(설계비 9% 장비 구매비 7.5% 건조비 2% 내외)
 -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운항시간이 적은 선박을 대상으로 다목적선박 건조 및 공동이용 등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
- (민간부문) 연간 신규건조 선박(약 164척) 중 친환경선박의 비율을 20%까지 확대하여 총 140척 전환(~'30)
 - 기존 '오염저감설비' 위주에서 '친환경연료·동력원'으로 전환하고, LNG 등 상용화 기술 先보급 후 新기술 점진적 적용 확대*
 - 신조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단 확대 및 다변화*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선박 민간보급 확산 추진
 - * (지원대상) 화물선·여객선→유·도선 등, (지원수단) 보조금, 이차보전→세제, 특별보증

□ 추진전략 6 :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

- (표준화·사업화) 新기술의 품질제고·사업화 연계를 위한 인증제도* 운영('21년~)을 통해 민간 금융지원 및 국내기술의 사업화 지원
 - * 기술 난이도·국산화율 등을 고려한 등급 부여 후, 자금 우선지원 등 혜택 부여
 - 산업부·해수부 공동으로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*를 지원('21년~)하고 IMO·ISO 등 국제 표준화 작업을 주도
 - * 국내 유망기술 선정 후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제시장 선점(국제표준화 추진단, '21~)
- (디지털·통계체계) 실제 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·검증 등 국가통계를 고도화('25년~)하고,
 - 원격진단 등이 가능한 친환경선박 지원센터* 구축('22~, 관공선 先적용),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 추진
 - * 주요 장비·시스템 이상 감지 및 처리방안 제공 등 선박운항 안전성 확보

6. 기대효과 : 친환경선박 시대 한국의 미래모습(2030년)

기술 선도



- ◆ 조선업 세계 수주 1위 유지
- ◆ 친환경선박 시장 1위 달성
 - * '20년 현재 LNG선박 수주 1위
 - > '30년 저탄소/무탄소 선박 시장 수주 1위
- ◆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 선도로 중국과 초격차 확보



해양환경 개선



- ◆ 친환경선박 도입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40만 톤, 미세먼지 3천 톤 감축
 - * (온실가스) '30년까지 40만 톤, (미세먼지) '30년까지 3,314톤
- ◆ 친환경선박에 의한 환경개선 비용(사회적 편익) 효과
 - * 2021년~2030년: 1조 2,522억원,
 - 2021년~2040년: 5조 8,033억원,
 - 2021년~2050년: 9조 8,708억 원



신시장 창출



- ◆ 국내 조선소 물량 확대로 신시장 창출
 - * 친환경선박 신조 건조 시, 조선·해운산업 매출 4조 8,563억원 창출
- ◆ 친환경선박 시장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
 - * (생산유발액) 10조 9,752억원
 - * (취업유발효과) 취업인원 40,113명 증가
- ◆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 - * 부산(1조 5,288억 원), 전남(1조 1,192억 원) 울산(1조 477억 원), 경남(4,371억 원) 등 조선·해운산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

